

EU Brief

| EU 동향 |

- K-팝을 바라보는 유럽의 또 다른 시선
Diverse Opinions on K-Pop in Europe
- 중남미 외채위기가 그리스 재정위기 해소에 주는 시사점
Lessons for Europe from Latin American Debt Crisis
- 2012년 프랑스 대선 전망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2012
- EU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개정과 영향
EU's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GSP)
- EU의 산업정책과 '혁신연합'
Industrial Policies in the EU and the Innovation Union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EU Focus

K-팝을 바라보는 유럽의 또 다른 시선 Diverse Opinions on K-Pop in Europe	002
--	-----



EU Economy

중남미 외채위기가 그리스 재정위기 해소에 주는 시사점 Lessons for Europe from Latin American Debt Crisis	004
---	-----



EU Politics

2012년 프랑스 대선 전망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2012	008
--	-----



Trade & Investment

EU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개정과 영향 EU's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GSP)	012
--	-----



Industry Trends

EU의 산업정책과 '혁신연합' Industrial Policies in the EU and the Innovation Union	017
--	-----



EU Law

한-EU FTA 협정과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문제 Korea-EU FTA and Legal Services Market	022
--	-----



Social Issues

유럽에 불고 있는 한류 The Korean Wave Striking Europe	026
---	-----



Report Review

지금 EU에는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가 Which Restructuring Does Europe Need the Most?	028
---	-----



EU Centre news

제8회 브뤼셀 포럼 The 8 th Brussels Forum	030
제2회 브뤼셀 Immersion Fieldtrip The 2 nd Brussels Immersion Field trip	031



K-팝을 바라보는 유럽의 또 다른 시선

Diverse Opinions on K-Pop in Europe

올 여름 유럽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유럽은 장바구니에서 출발한다. 한-EU FTA가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됨에 따라 국내 대형 유통 마트에서는 벨기에산 삼겹살을 국내산 삼겹살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구제역 여파로 최근 삼겹살이 ‘금겹살’이 된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 역시 유럽으로 입성하고 있다. 신한류를 대표하는 K-팝(pop)은 문화상품이란 이름으로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유럽 공략을 시작했다. 2011년 6월 10일부터 이틀간 파리의 르 제니트 드 파리(Le Zenith de Paris)에서 열린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의 공연 소식은 한국언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데 충분했다.

공연 전 프랑스의 대표 일간지인 『르몽드(Le Monde)』와 『르피가로(Le Figaro)』는 각각 ‘한류가 유럽을 점령한다’ (6월 10일), ‘한류가 제니트에 몰아치고 있다’ (6월 9일)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으며, 대표 인터넷 신문인 『뤼 89’(Rue 89)』도 공연이 열린 6월 10일을 “K-Pop 열병이 파리를 덮친 날”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프랑스 언론의 관심은 한국의 어린 아이돌 가수의 가창력과 대중성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이들의 ‘탄생과정’으로 이어졌다. 유럽 언론은 소속사와 몇몇 가수 간의 불공정 계약과 연습생들의 고된 훈련 과정 등 한국 음반산업계의 관행을 비판하였다. 『르몽드』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18~22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보통 3~5년 정도의 혹독한 훈련을 받고 때로는 성형수술까지 마다하지 않는” K-팝 가수들의 탄생과정에 주목했고, 영국의 BBC는 ‘한국 팝

뮤직의 어두운 면’ (6월 14일)이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보도에서 한국 소속사와 가수 간의 불공정 전속계약을 언급하면서 K-팝이 미국과 유럽에 들어오면서 한국 음반업계가 아티스트를 다루는 방식이 바뀔 것인지 묻고 있다. 문화산업을 읽는 데에도 단순히 현상을 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생산과 소비 과정의 구조를 고민하는 것이 ‘유럽의 시선’이었던 것이다.

K-팝에 대한 유럽의 이러한 상반된 반응은 그만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적 애국주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최근 유럽이 소비 담론의 경향을 주목하는 방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소비문화가 점점 더 상품 자체보다는 상품의 생산 및 공정, 심지어는 폐기 처분까지 주시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 발전 담론으로 대두하고 있는 제품전생애분석(LCA), 생산 자책임제도(PL), 공정무역(Fair Trade), 사회적 책임(SR), 착한소비 등이 이러한 트렌드를 대표한다. 따라서 가수의 노동 관행까지 관심을 갖는 유럽언론의 세심함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EU FTA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FTA와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FTA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유럽과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을 통해 주고받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인간의 행동양식과 윤리의식 등 문화 자체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이진량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This summer, Europe is coming closer and closer to us. Consumers are beginning to feel a closer Europe starting from their shopping trips. As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has come into effect on July 1st, grocery stores are selling pork belly from Belgium for a lower price than that from Korea. It is a good news to the consumers, for pork belly has nowadays gained the nickname of ‘golden belly’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price as a consequence of the foot-and-mouth disease that recently spread throughout Korea.

Korea is also entering Europe. K-pop, a cultural product that represents the new generation of the Korean Wave, has begun to target Europe, starting from Paris. The news about S.M. Entertainment’s idol stars performing at Le Zenith de Paris for two days starting on June 10th was more than enough to spur an excitement among the Korean media.

With this event, the French media started to show interest in K-pop. Before the concert, a major French daily newspaper Le Monde and Le Figaro published articles respectively titled ‘The Korean Wave is Capturing Europe (June 10th)’ and ‘The Korean Wave is Striking Zenith (June 9th)’.

However, the French media’s interest in K-pop does not end on the young Korean idol stars’ singing capabilities and mass appeal; they are also curious about how these stars were born. Korean music industry’s customs such as artists’ intense training process and unfair contracts between some record labels and artists were not able to avoid negative views from European media. Le Monde focused on the process of producing K-pop stars, in which ‘young adults between 18 and 22 are chosen through a cutthroat competition, usually go through 3 to 5 years of

training, and sometimes don’t hesitate to get plastic surgery,’ and the United Kingdom’s BBC News asks ‘will this force a change in the way it treats its artists?’ mentioning the unfair ways the Korean music industry treats some of its artists in its article ‘The Dark Side of South Korean Pop Music (June 14th).’ It was Europe’s way to not only shed a light on the effects but also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ystem behind production and consumption processes when analysing the cultural industry.

Such conflicting European responses to K-pop also shows that the interest in Korean culture is rising. We then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Europe’s recent focus on its consumption behaviour rather than viewing this K-pop phenomenon from an economically nationalist perspective. Including in Europe, it has been a global trend to focus more on the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processes and even the disposal of products instead of on the product itself. Life Cycle Assessment, Producer Responsibility, Fair Trade, Social Responsibility, and Good Consumption represent the recently discussed topic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us, maybe it is only natural that the Europeans are careful enough to pay attention to labour practices of pop artists.

The Korea-EU FTA is different from other FTAs because it contains agreement terms addre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We are now living in the FTA era; in order for Korea to maintain a sustainabl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Europe, Korea needs to realise that through trade, we are not only exchanging products and services but also behavioral patterns, ethics, and our cultures. ★



중남미 외채위기가 그리스 재정위기 해소에 주는 시사점

Lessons for Europe from Latin American Debt Crisis

Europe's fiscal crisis bears a strong resemblance to the Latin American sovereign debt crisis of the 1980s. Both are similar in that the problem was exacerbated due to a failure of initial responses and that the neighbouring countries were damaged by contagious effects. Moreover, these events have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major creditor nation in solving the problem. Therefore, in order to find the solution for the European debt crisis, Brady Plan which was adopted to fix Latin America's debt problems must be looked at. The core of the Brady Plan was to restore trust through a debt swap with guarantees by the US government. For the same reason, if the European Central Bank decides to warrant peripheral members' debt payment, it could help the speedy recovery of creditors' trust. Moreover, an institutional support must be accompanied since creditor nations are bound to suffer a loss due to debt restructu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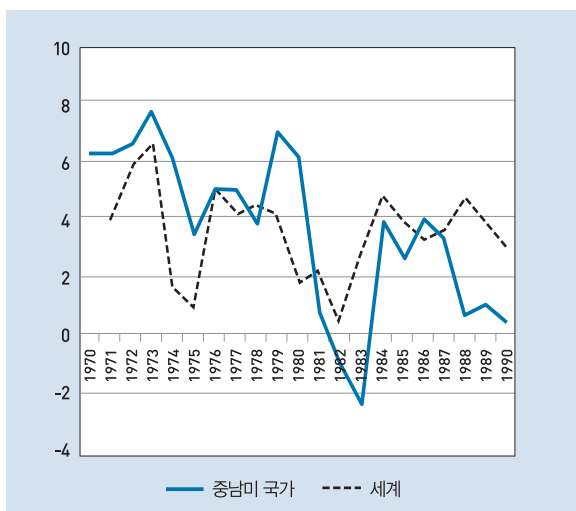
그리스 재정위기 해소의 모델이 된 브래디 플랜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의 해소가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2011년 7월 21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그리스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1,090억 유로 상당의 제2차 구제금융안에 동의했다. 특히 은행 등 민간 투자자가 500억 유로에 달하는 원금손실(haircut)을 부담하여 처음으로 구제금융에 참여했고, 중남미 외채위기 당시 사용한 브래디 본드(Brady Bond)를 채택하여 그리스의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그리스 부채 현재가치의 20%를 손실로 부담하고, 그리스 국채를 30년 만기 채권으로 교환한다. 그리스는 채무의 상환기간이 7년 6개월에서 30년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20% 부채 탕감으로는 그리스의 채무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최소한 50%의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¹ 현재 그리스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70% 수준이며, 무디스는 최근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임을 나타내는 Ca로 하향 조정했다.

그리스 재정위기 해소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번 구제금융안의 모델이 된 중남미 외채위기

★ 외채위기 전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World Bank

당시 사용한 브래디 플랜(Brady Plan)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남미 외채위기

1980년대 초반 외채위기를 겪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국가는 마이너스 성장과 최고 100%에 달하는 물가상승 등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경험했다. 중남미 국가의 연평균 성장률은 1970년대 5.6%로 세계 평균인 3.8%보다 높았으나 1980년대에는 1.3%로 하락했다. 외채위기 발생 이후부터

★ 외채위기 전후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

연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중남미 7개국	61.9	166.6	1478.0	32.3
세계 평균	17.0	14.2	27.0	10.4

주: 중남미 7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
자료: IMF, IFS.

1997년까지 중남미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은 외채위기 발생 이전인 1980년 수준에서 정체했다.² 또한 외채위기 발생 이후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불안이 가중되었다.

중남미 외채위기는 1970년대에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대외채무를 증가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³ 1970년대 오일쇼크로 석유가격이 상승하면서 OPEC 국가는 불어난 자금을 미국, EU의 주요 은행에 예금했고, 그 돈은 다시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었다. 당시 선진국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석유자원을 보유한 중남미 개발도상국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다. 중남미 국가는 유치한 오일 머니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달성했으나, 동시에 GNP 대비 외채 비율이 1970년 20.6%에서 1987년 62.2%로 급증했다.

1980년대 초 글로벌 경기침체로 채무국에서 수출 감소, 달러 강세, 금리 상승이 복합적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채무국은 채무지급에 부담을 가지기 시작했다.⁴ 이후 해외투자자가 자본을 대량으로 회수하면서 통화 가치가 절하되고 결국 중남미에서는 외채위기가 발생했다. 멕시코, 브라질 등이 채무상환 부담에 못 이겨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⁵ 또한 이들 국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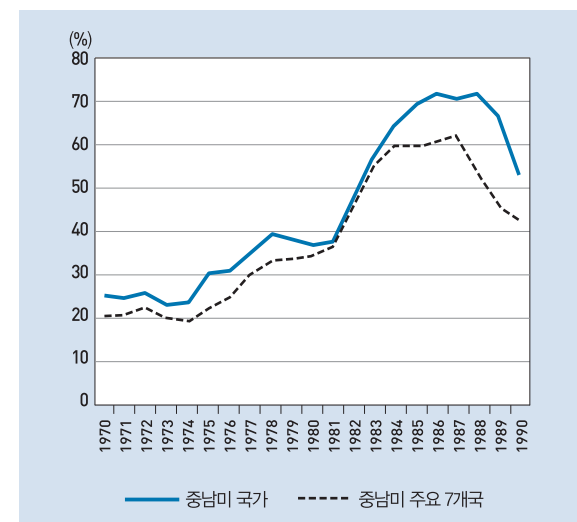
² 이재열 (2000). "중남미 금융위기의 반복 요인과 시사점" (한은조사연구 2000-8). 한국은행.

³ 신종현, 최형선, 최원 (2010).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보험연구원.

⁴ Carrasco, E.R. (1999). The 1980s: The Debt Crisis and The Lost Decade, *The University of Iow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and Development*, 9, 119-136.

⁵ 1982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 채무지급 유예를 선언

★ 중남미 국가의 GNI 대비 외채비율



자료: World Bank

채권을 대량으로 보유한 미국 등의 주요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중남미 외채위기

중남미 외채위기 발생 초기(1982년)에는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Paris Club)의 지도하에 부실채권에 노출된 정도가 심한 은행을 중심으로 채무 구조조정 협상이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재정적자 감축, 평가절하, 긴축통화(인플레이션 방지) 등을 조건으로 채무국에 새로운 대출을 허용하고 채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은행이 채무국의 상황을 단순한 유동성 부족이 아닌 지불능력 문제로 판단하면서 2~3년 후에 신규 대출이 감소하는 채무피로 현상이 발생하면서 실패했다.

이후 1985년에 실시한 베이커 플랜(Baker Plan)⁶ 역시 부채 탕감보다는 단순한 구제금융의 성격이 커서 위기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⁷ 국영기업 민

⁶ 당시 미국 재무장관 제임스 베이커(James Baker)가 제안

⁷ 최준철 (1993). "외채문제를 통해 본 중남미 경제." 『중남미 연구』, 10, 67-93.

¹ Münchau, W. (2011. 7. 24.). The Eurozone Crisis is on Pause, not Over. *Financial Times*. <http://www.ft.com/cms/s/0/d2818128-b619-11e0-8bed-00144feabdc0.html#axzz1TqeH4bpT>



영화,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채무국 15개국에 290억 달러 상당의 신규 용자를 제공하려 했으나, 대출은행이 계획의 실효성을 의심하면서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채무국도 여전히 채무지불을 연기하고 구조개혁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초기 대응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중남미 경제와 재정 상황에 대한 비현실적인 전망 때문이었다. 채권국은 중남미에 신규 자금을 용자해주고 채무 상황을 연기해주면 채무국이 성장을 회복함으로써 향후 재정상황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브래디 딜(Brady Deal)의 성공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이후 주요 채권국은 추가 대출보다는 근본적으로 채무 원리금을 탕감해주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했다. 구체적으로 1991년 기존 채무를 최장 30년 만기 채권인 일명 ‘브래디 채권(Brady Bond)’으로 교환해주고 미국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브래디 딜 정책을 실시하였다.⁸ 브래디 채권은 개발도상국이 발행하는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으로 미국 연방은행 채권이 담보 역할을 수행했는데, 기존 채무를 일부 탕감하거나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다. 또한 미국정부가 직접 채무보증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결국 1991년 중남미 국가의 자본 유입이 유출을 능가했으며 이후에도 위기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으나 2006년 중반까지 대부분의 브래디 채권을 채무국이 재구입하여 중남미 외채위기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브래디 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남미 국가들이 국제 자본시장에 재접근할 수 있도록 시장 신뢰를 회복한 데 있다.

브래디 딜은 채무국의 채무를 상당 부분 탕감해주고 채무국이 경제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을 시행하도

★ 중남미 외채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 비교

구분	중남미 외채위기	남유럽 재정위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0년대 선진국 경기둔화로 개발도상국 자금공급 확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신규 대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브프라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선진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남유럽 국가 재정적자 급증
유발요인	• 2차 오일쇼크(1979년)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위기 성격	• 외채 과다로 인한 국가부도 위기	• 재정 및 경상수지 악화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아프리카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리스의 국제 신용등급(rating) 하락 이후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로 확대
해결 중심국	• 미국	• 독일, 프랑스, 영국
외채 규모	• 3,150억 달러(1983년)	• 7조 5,500달러(PIGS, 2010년 2/4분기)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각한 경기후퇴와 물가상승의 스태그플레이션 경험 주요국은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lost decade) 	• 경기부진 장기화 예상
위기 극복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정책대응 실패(1982~1985년) 이후 브래디 플랜(1987년) 	• EU 구제금융, 채무재조정

록 조정하였다. 채무국은 자체적으로 민영화, 구조조정, 금융규제 강화, 환율제도 변경 등을 시행하여 재정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정을 추구했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또한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크롤링 펙(Crawling Peg)⁹을 도입하여 이자율 상승 압박에서 벗어났다.

남유럽 재정위기 해소에 주는 시사점

중남미 외채위기는 현재 진행 중인 남유럽 재정위기와 연관성이 크다. 첫째, 중남미 외채위기는 미국 등

을 중심으로 해결되었는데, 남유럽 위기 역시 독일 등 주요 채권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중남미 외채위기 초반에는 채권국이 채무 탕감 등 본격적 조치 없이 미약하게 대응하다 사태가 장기화되었는데, 남유럽도 비슷한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독일 등 주요 채권국은 원금손실(haircut) 때문에 채무재조정을 상당 기간 망설여왔고, 채무국인 그리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채무재조정의 조건인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셋째, 재정위기가 주변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중남미 외채위기 당시 멕시코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주변 국가로 퍼졌는데, 이번 남유럽 재정위기 역시 그리스에서 시작된 위기가 이탈리아 등 주변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중남미 외채위기 때처럼 그리스가 의미 있는 부채 탕감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해 시간을 벌며 경제성장으로 국가채무를 줄인다는 발상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채무 지불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채무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기보다는 부채를 대폭 탕감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그리스는 긴축재정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경쟁력 회복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빠른 위기 극복과 주변 국가 전이를 막기 위해 주요 은행이 보유한 그리스 채권을 30년 만기 채권으로 교환하고 손실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은 최근의 대안은 바람직하다. 물론 그리스 국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채권국이 현재의 20% 수준보다 더 많은 손실을 분담해야 하고, 중남미 외채위기 당시 미국정부가 브래디 채권의 채무지급을 직접 보증한 것처럼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직접 채무지급을 보증하여 채권자의 신속한 신뢰 회복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채무재조정으로 손실을 입은 주요 채권국이 남유럽 채무국의 경기 회복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브래디 플랜에서는 채무상환금을 채무국 교역조건에 연동시켜 채무국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채권국도 이득을 얻도록 조정했다.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 증진이 불가능한 남유럽에서는 채무상환금을 성장률에 연동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⁸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니컬러스 브래디(Nicolas Brady)의 이름을 붙임

⁹ 통화를 달러에 연계시키고 주기적으로 환율을 조정





2012년 프랑스 대선 전망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2012

France's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held in 9 months time. This election is likely to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direction of not only its domestic politics but also of the EU. As a majority of far-right extremist parties maintains a negative stance on the EU and the expansion of the eurozone, their rise is going to be a huge impediment to the future of the EU. While the chance of President Sarkozy being reelected remains slim, the Front National Party elected a new leader in January, 2011. The party abandoned its unyielding and drastic characteristics and gained popularity among French voters with a gentle and fresh image. Although current polls indicate that the Socialist Party is leading and left-wing scored a landslide victory in the local election held in 2010, it is too early to predict the result of next year's election. In any case, the messages of far-right extremist parties and the reasons behind the public support need further reflections.

대통령중심제 강화 현상

프랑스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프랑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EU의 향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이전에는 프랑스 대통령 임기(7년)와 국회의원 임기(5년)가 일치하지 않아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한 번은 총선을 치렀고, 1980년대에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 아닌 동거정부가 계속 등장하였다. 하지만 2000년의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어 국회의원 임기와 똑같아졌고, 2002년부터 5월에는 대선, 6월에는 총선을 실시하여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 정치를 급속히 대통령중심제로 변화시켰는데,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을 보인 2007년 대선은 프랑스 국민의 관심이 대통령에 집중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대통령중심제 강화 경향은 총선보다 먼저 치르는 2012년 대선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당 간 뚜렷한 정책 차이

최근 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양당제화 속에서 치러지는 프랑스 2012년 선거는 각 정당이 뚜렷한 정책 차이를 보이고 있어 '누가 당선되느냐'도 관심사지만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 역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2차 투표에서 맞대결한 대중운동

연합(UMP)의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와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 후보는 분명한 정책 차이를 보여주었다. 사르코지는 '노동의 가치 복원'과 '공급 중심의 유연한 시장정책'을 제시한 데 반해, 루아얄은 '빈곤층에게 구매력 분배', '수요 중심의 안정된 시장정책'을 내세워 전통적인 우파와 좌파의 정책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2012년 선거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우파에서는 대중운동연합의 사르코지가 가장 유력하고, 사회당에서는 10월 전당대회 이후에 보다 분명해지겠지만-현재 거론되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모두 사회당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 색채를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누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사르코지와는 분명히 다른 정책 지향점을 보여줄 것이다. 1995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퇴임 이후 정권을 내주고 있는 사회당으로서는 이번 대선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며, 우파로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속이라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승부가 될 것이다.

EU의 미래에도 중요한 분수령

유럽과 EU에게도 2012년 프랑스 대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EU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유럽 내 우경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고 유럽 주요 국가에서 우파정권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민자 문제와 다문화주의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극우정당이 각 선거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얻고 있다. 대부분의 극우정당은 EU와 유로존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극우정당의 득세는 EU의 미래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유럽 정당이 크게 약진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더구나 극우정당은 최근 극단주의적·폭력적 이미지를 상당히 쇄신하면서 유권자에게 다가가며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데, 대표 정당이 프랑스의 극우정당 민족전선(FN)이다.

민족전선은 2011년 1월 새로운 당수를 선출한 뒤에 이전의 강경하고 극단적인 이미지 대신 부드럽고 신선한 이미지로 프랑스 유권자에게 다가서고 있다. 새당수로 선출된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이전당수인 장마리 르펜(Jean-Marie Le Pen)의 딸로 프랑스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3월 『르 파리지앵(Le Parisien)』이 실시한 2012년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4%가 마린 르펜에게 투표하겠다고 대답했다. 유로화 탈퇴와 프랑화 복귀, 프랑화 가치절하를 주장하는 마린 르펜의 지지율 급등은 곧 프랑스 국민 사이에서 반유럽 정서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녀의 행보는 유럽을 긴장시키고 있다.

사르코지의 재선은 쉽지 않을 전망

이처럼 중요한 프랑스의 2012년 대선 전망을 정당별로 살펴보자. 현재 대통령인 대중운동연합의 사르코지는 지지율 열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국제통화기금 전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의 낙마 이후 다소 지지율을 회복하였고, 7월 말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합의에서 중재역할

¹ 6월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30%였지만, 7월 말 조사에서는 36%로 높아졌다.

² 7월 22일 『프랑스 수아르(France Soir)』와 프랑스여론연구소(IPOP)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대통령직 수행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프랑스 국민의 비율은 다소 높아졌지만,¹ 2010년 연금개혁안 통과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2012년 대선에서 사르코지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1~25%로 상당히 낮은 상태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력한 대선 후보인 사회당의 예비후보, 예를 들어 전 당수였던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나 현 사회당 당수인 마르틴 오브리(Martine Aubry)와의 가상 대결에서 오브리에게는 47대 53으로, 올랑드에게는 43대 57로 패한다고² 나타나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7월 21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사르코지가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예측했고 응답자의 66%가 재선을 바라지 않는다고 답해서 유권자 예측과 유권자 바람 모두에서 사르코지의 재선이 어렵다는 전망이 드러났다. 스트로스칸의 낙마 이후 사르코지는 다시 지지율 18%를 회복하였지만, 현재 지지율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대중운동연합이 참패함으로써 소속 정당과 본인이 인기가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냈다.³ 물론 사르코지는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철수 같은 여론을 의식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극우정당

전통적인 우파 지지자 가운데 사르코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들은 대부분 극우세력인 민족전선의 마린 르펜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마린 르펜은 2011년 1월 당권을 이어받은 뒤에 극우정당의 모습을 쇄신하고 유권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당을 유연화하고 있다. 마린 르펜은 아버지 장마리 르펜과는

³ 2010년 3월 27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사회당은 36%, 대중운동연합은 18.6%, 국민전선은 11%의 지지율을 얻었다. 전체적으로 사회당을 포함한 좌파계열 정당이 56%를 얻어 대중운동연합을 비롯한 우파가 선거에서 대패하였다.





달리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을 삼가고 과거 유대인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민족전선은 극단주의적인 인종차별주의 정당이 아닌 건설하고 정상적인 정당이라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각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킨헤드 같은 인종주의자들과도 거리를 두고 있으며,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신규 당원과의 만남도 자주 가지면서 당의 극단주의적인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마린 르펜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사르코지의 무능함과 그의 정책에 싫증을 느낀 우파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 있다. 지난 3월 『르 파리 지앵』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4%로 나타났고, 7월 22일 『프랑스 수아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1%로 나타났다.

마린 르펜은 민족전선의 전통적인 반이민자 정책과 더불어 반유럽 정책(유로화 탈퇴, 프랑화 복귀)을 표방하고 반자본주의 정책(전략산업의 국유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경제불황과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프랑스 노동자는 이러한 반이민자 정책, 반유럽 정책, 반자본주의 정책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민족전선에 더 이상 극단적인 인종주의 정당이 아니라 건설하고 정상적인 정당이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지자 극좌정당을 지지하던 노동자 중에서도 마린 르펜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⁴

그러나 마린 르펜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바로 결선투표제 때문이다. 프랑스의 선거제도는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없으면 1, 2위를 한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2002년 아버지 르펜은 1차 투표에서 자크 시라크(Jaques Chirac)에 이어 2위로

2차 투표까지 갔지만 50%의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하였다. 극우파의 당선을 막으려는 좌파 유권자가 시라크를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마린 르펜이 2012년 대선에서 2차 투표까지 가더라도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 당선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칸의 낙마 이후 분위기 쇄신 중인 사회당

세 번째 후보군은 사회당 예비후보군이다. 사회당은 10월 9일과 16일의 전당대회를 통해 당내 대선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당 프라이머리(Primaire présidentielle socialiste)⁵에 참가할 후보는 모두 6명으로 현재 당수인 오브리, 전 당수였던 올랑드, 2007년 대선 사회당 후보였던 루아얄 그리고 장-미셸 바이렛(Jean-Michel Baylet), 아르노 몬테부르(Arnaud Montebourg), 마누엘 발스(Manuel Valls) 등이다. 이 중 오브리와 올랑드가 앞서고 있고 루아얄이 그 뒤를 쫓고 있다.

스트로스칸의 낙마로 크게 실망했던 사회당원은 당수인 오브리의 출마 선언과 오랫동안 대통령을 꿈꾸던 올랑드의 참여로 서서히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특히 오브리와 올랑드 모두 여론조사에서 사르코지를 앞서고 있고 2차 투표 가상 대결에서도 사르코지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당 내에서 2012년 선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오브리는 2008년부터 사회당 당수를 맡고 있으며 전통적인 사회주의자로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며 35시간 노동제를 이룬 장본인이다. 올랑드는 2004년 유럽헌법 투표에서 당시 당내 2인자였던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의 반대에 맞서 찬성으로 당내 입장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유럽헌법 통과 실패 이후 지지세가 약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스트로스칸의 낙마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하여 오브리보다

약간 앞서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사회당은 2012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10월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승 분위기를 지속하면서 사회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고히 할 예정이다.

결선투표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군소정당

네 번째 후보군은 군소정당이다. 프랑스는 결선투표제라는 특징 때문에 항상 많은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다. 지난 2007년 대선에는 모두 14명이 출마하였고 이번 선거에도 적지 않은 후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대선 1차 투표에서 3위를 했던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 후보는 18.57%의 득표율로 사르코지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중소 후보의 득표율과 2차 투표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노르웨이 출신의 에바 졸리(Eva Joly) 유럽의회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환경운동가

니콜라 율로(Nicolas Hulot)를 당내 경선에서 누르고 녹색유럽생태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녀는 20~25년 뒤에 프랑스에서 원전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여 높은 지지를 얻었다. 또한 공산당과 극좌파인 노동자투쟁당의 좌파도 후보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사회당이 앞서 있고 가장 최근 선거인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좌파가 대승을 거두었지만 2012년 선거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프랑스 사회당은 2004년 지방선거에서 이겼지만 2007년 연이은 대선과 총선에서 패했던 경험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또한 대선 1차 투표에서 50%가량의 표를 가져갈 제3의 후보군이 2차 투표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도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린 르펜의 득표율이 장기적으로 프랑스 사회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불안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⁴ 7월 22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0%가 민족전선이 정권을 인수할 만한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프랑스 국영철도인 SNCF 노동자 중 CGT 소속 노조원 가운데에는 이미 민족전선의 당원증을 가진 노동자가 상당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⁵ 2011년에 개정된 사회당의 프라이머리는 이전과는 달리 당원뿐만 아니라 좌파 정책의 동의하는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개방형 프라이머리다.





EU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개정과 영향

EU's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GSP)

The EU's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 allows exporters from developing countries pay lower duties in order to give them access to EU market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ir economies. The EU adopted the GSP in 1971 and Korea was excluded from the list of beneficiary countries in 1995. On May 10th 2011,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ut forward a revised GSP package which will come into force on January 1st 2014. The main features of this revised plan are that it ensures the benefits are concentrated on fewer countries which need it the most while promoting the main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 plans to reinforce the incentives for the respect of core human and labour rights, environmental and good governance standards.

현재 3가지 종류의 GSP 제도를 운영 중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선진국이 수입 관세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해 줌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수출 촉진과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를 말한다. 현재 EU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호주, 스위스 등 13개국이 GS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U의 GSP 혜택 제공규모는 2009년 기준 약 595억 유로로, EU 전체 수입액의 4%, 개발도상국 수입액의 9.3%에 이른다. EU의 GSP 혜택 규모는 미국, 캐나다, 일본이 제공하고 있는 혜택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크다.

2006년부터 시행된 EU의 현행 GSP 제도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표준(standard) GSP로, 6,200개 이상 품목에 대해 176개의 개발도상국 또는 속령이 혜택을 받고 있다. 둘째는 GSP+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인권 보호, 테러 방지 등 선정(善政, Good Governance)과 관련한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일부 취약한 개발도상국이 수혜 대상이다.¹ 셋째는 EBA(Everything But Arms)²로, 49개 최

★ EU GSP 제도 현황

구분	GSP(일반)	GSP+	EBA
대상 국가	• 176개 국가 및 속령 (GSP+, EBA 포함)	• 15개 국가 ¹	• 49개 최빈국
EU 수입액	• 480억 유로	• 53억 유로	• 62억 유로
수혜 내용	• 비민감 제품에 대한 관세 제외(약 2,400 계열) • 다른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일반제품 3.5%, 섬유 및 의류 제품 20%)	• 27개 국제협약에 비준하고 준수하는 취약 국가에 추가 관세 혜택(주로 관세 면제)	• 관세 및 쿼터 제외
수혜 품목 수	• 6,244개	• 6,336개	• 7,140개
주요 수혜국	• 인도 (131억 유로), • 방글라데시(45억 유로), • 태국 (42억 유로), • 인도네시아(34억 유로), • 브라질 (34억 유로), • 러시아(29억 유로)	•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몽골, 코스타리카 등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세네갈, 말라위, 에티오피아 등
주요 수입품	• 섬유 및 의류 (142억 유로), • 광물 (56억 유로), • 화학제품(51억 유로), • 기계 (48억 유로), • 플라스틱&고무 (47억 유로)	• 야채, 가공식품, 동물, 광물	• 섬유, 동물, 가공식품, 신발, 야채

빈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에게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해 쿼터 제한 없이 100%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을 고려해 GSP 제도를

대폭 개정

EU는 1971년부터 GSP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1995년에 수혜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³ EU 집행위원회는 환경 변화에 따라 GSP 제도를 변경해왔는데, 가장 최근에는 2008년에 제도를 개정하였다.⁴ 그리고 지난 5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았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번에 GSP 제도를 대폭 손질하려는 이유는 첫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반영하여 GSP 취지에 맞게 혜택이 꼭 필요한 국가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며, 둘째, 지속가능한 개발과 선정(善政)이라는 주요 원칙을 도모하고, 셋째, 법적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특히 GSP 수혜 대상국 중 지난 20~30년 동안 신흥 선진 개발도상국으로 발전하여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있는 반면, 일부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낙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빈국이나 중하위 소득 국가에 GSP 수혜가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EU 집행위원회의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대로라면 현재 EU GSP 혜택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브라질, 중국, 인도, 태국 등 5개국이 1990년대 중반 한국 등 동아시아 3개국과 마찬가지로 GSP 수혜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EU 집행위원회의 카렐 더휘흐트(Karel De Gucht)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5월 10일 유럽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급속한 경제 발전 중인 국가에 대해 GSP를 부여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이들 국가를 수혜 대상국에서 우선 제외할 방침임을 시사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작성한 나라별 국민소득 순위를 보더라도, 최근 여러 개발도상국의 순위가 상승하여 빈곤 퇴치

³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 홍콩, 대만 3개국이 전체 GSP 혜택의 45%를 차지하였다.

⁴ 2008년 7월 22일에 채택된 새로운 GSP 제도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시행된다.

를 목적으로 실시한 GSP 혜택 부여의 당위성이 약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EU와 ASEAN의 FTA 타결이나 인도와의 FTA 협상 진행 등 쌍무적인 FTA가 여러 개발도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GSP 제도의 취지는 더욱 약화되고 있다.

수혜 대상국을 80여 개국으로 대폭 축소

GSP 제도 개정의 핵심은 GSP 수혜 대상국 수를 대폭 축소하고, GSP 졸업(graduation) 및 일시 정지(temporary withdrawal) 조건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것이다.

GSP 제도 개정으로 현재 176개국에 달하는 GSP 수혜 대상국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대상 국가는 ① 1인당 국민소득(GNI) 기준으로 3년간 세계은행이 상위 또는 중상위 소득국가로 분류한 국가들이 1차 대상이며, ② EU와 별도로 FTA나 경제협력 협정 등을 체결하여 GSP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도 제외 대상이다. 여기에는 발칸반도 국가에 적용되는 특별협정도 포함된다. ③ 남극대륙부터 미국령 사모아까지 선진시장으로서 별도의 시장접근 협정이 체결된 해외 속령이나 영토도 포함된다. ①과 ②에 해당하는 국가는 GSP 수혜 자격이 유지되지만(eligible), 더 이상 수혜국(beneficiaries)은 아니다. 이는 향후 세계은행이 해당 국가를 상위 또는 중상위 소득국가로 분류하지 않거나 FTA가 종료되는 등 상황이 변경되면 다시 수혜국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혜 대상국은 각료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2011~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국가를 선정한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러시아, 카타르 등의 제외가 확실시된다. 따라서 수혜 대상국은 현재 176개국에서 약 80여 개국으로 대폭 줄고, 수혜금액도 36%(218억 유로) 감소한 377억 유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은 중저소득 국가(국민소득 996~3,945달러)로 분류되어 계속 수혜국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¹ GSP+는 2005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2009년 1월에는 16개국이 수혜 대상국이었으나, 2009년 6월 베네수엘라가 제외되어 현재는 수혜 대상국이 15개국이다.

² 이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수혜 대상국 축소와 관련해서 해외 개발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이전 식민지 국가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해온 일부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수혜 대상국 최종 선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츠와나와 모리셔스 같은 GSP 수혜 대상국에 대해서는 과도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절충안도 제기되고 있다.

수혜 대상 품목에는 변화 없어

한편 수혜 대상 품목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현재 표준 GSP는 모든 품목의 90%를 수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EBA는 모든 품목을 수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표준 GSP 수혜 대상 품목을 확대하거나 관세 감면 폭을 확대하면 EBA나 GSP+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수혜 대상을 더 집중시키기 위해 ‘졸업 개념(graduation principles)’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졸업’은 어떤 수혜국의 대EU 수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2008년 개정된 GSP 제도에 따르면 3년 연속 특정 수혜국의 특정 품목이 GSP 수혜하에 수입된 동일 품목 전체 수입의 15%를 넘으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예외적으로 섬유 및 의류제품의 비율은 12.5%로 규정되어 있다.

EU의 GSP 혜택을 받는 국가는 176개국이지만, 일부 국가는 졸업규정에 의해 주력 수출품목이 GSP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2009~2011년 국가별 수혜 제외 품목을 보면, 브라질(조제식품, 목재 및 목제품), 중국(화학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가죽 및 여행용 가죽가방과 핸드백, 목재 및 목제품, 섬유 및 섬유제품, 신발 및 양산류, 시멘트제품, 유리 및 세라믹제품, 귀금속, 기계, 전기장비, 음성녹음기 및 재생기기, 영상재생기, 운송기기, 광학기, 측정기기, 의료기기, 시계류, 악기류, 잡제품 등), 인도(섬유), 인도네시아(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왁스), 말레이시아(동

물성 및 식물성 유지, 왁스),⁵ 태국(반귀금속, 모조 장신구류, 동전), 베트남(신발, 헤드기어, 우산, 양산, 조화, 가발 등) 등으로 많은 주력 수출품목이 GSP 관세(3.5%)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GSP 개정안은 졸업 개념이 적용되는 품목군을 보다 동질적인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21개에서 32개로 늘릴 방침이다. 졸업 기준이 되는 수입점유율도 일반제품은 현재의 15%에서 17.5%로, 섬유 및 의류제품은 12.5%에서 14.5%로 높하기로 했다. 졸업 개념은 수출품목이 다양하지 않은 취약국가가 수혜 대상인 GSP+ 수혜국이나 최빈국(LDCs)이 수혜 대상인 EBA 수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졸업 대상이 될 품목군은 이 개혁안이 시행되기 직전의 가장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GSP+는 수혜 국가 확대와 기준을 강화

GSP+의 경우, 수혜국을 확대하고 조건을 강화할 전망이다. EU는 인권, 노동권, 지속가능한 개발과 선정(善政) 원칙을 확산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GSP+ 수혜 대상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GSP+ 수혜 대상국은 표준 GSP의 혜택을 받고 있는 선진 신흥 개발도상국에 비해 더 유리한 혜택을 받으면서 졸업 개념도 적용받지 않는다. GSP+ 수혜 대상국 신청은 현재는 18개월에 1번씩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국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GSP+ 수혜 여부 결정 기준은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수출액이나 수출품목의 다양성 여부로 결정된다. 2008년 개정된 현행 GSP 제도에서는 수출액이 전체 GSP 수혜를 받은 수입량의 1%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국의 최상위 5개 수출 품목군이 전체 대EU 수출에서 75% 이상을 차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입점유율 기준을 1%에서 2%로 높이고, 다양성 취

⁵ 중국의 대EU 수출의 약 80%가 졸업규정에 따라 GSP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약 기준은 75%로 유지하는 대신 최상위 5개 제품군이 아닌 7개 제품군으로 변경하였다.

수혜 대상 품목군은 현재 21개 중 5개 품목이나, 앞에서 밝힌 것처럼 품목군을 21개에서 32개로 세분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32개 품목군 중 7개 품목군이 수혜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취약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GSP+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국은 아동권리협약, 근로자 권리에 관한 협정,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을 비준해야 한다. 현재 EU가 요구하고 있는 협정은 27개로 이 중 인종차별에 관한 협약을 삭제하고 대신 UN 기후변화 협약을 추가할 방침이다. 만약 이러한 약속 내용을 충족하지 않으면 GSP+ 수혜 대상국에서 신속하게 제외되며, 2년마다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모니터링 절차가 강화될 것이다.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약속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수혜 대상국이 약속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EBA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

최빈국을 수혜 대상국으로 하는 EBA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즉 EU는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해 무관세 및 쿼터 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고, 그동안 최빈국의 원성을 샀던 원산지 규정도 보다 유연하게 변경할 예정이다. EBA는 표준 GSP 수혜 대상국이 대폭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원자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관행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GSP 수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반테러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수혜국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GSP 수혜를 철회하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절차도 개선하였다.

2014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

이번 GSP 제도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와 공동결정 절차를 거쳐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입법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늦어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3년 주기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GSP 제도는 2011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롤오버(roll over)⁶ 규정에 따라 GSP 제도의 공백을 막기 위해 현행 GSP 제도가 2013년까지 잠정 적용될 예정이다.

호혜주의 무역정책에서 후퇴

이번 GSP 제도의 개정 내용을 분석해보면 EU의 몇 가지 정책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첫째, EU는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개발도상국에게 더 이상 GSP 혜택을 공짜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둘째, 개발도상국이라 하더라도 GSP를 통한 비상호주의적 호혜관계보다 FTA 체결 등을 통해 상호주의적 무역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셋째, 개발도상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인권, 노동, 환경, 기후변화 등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s)’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넷째, GSP 수혜국을 대폭 축소하여 EU의 재정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제도 개정으로 GSP 혜택을 받는 수입액이 2009년 595억 유로에서 377억 유로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연간 관세수입 손실액은 29.7억 유로에서 18.7억 유로로 줄어들어 연간 약 10억 유로의 재정수입 증대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의 대EU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된 한국으로서 2014년부터 개발도상국이 EU의 GSP 수혜 대상

⁶ 채권이나 계약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의미





에서 제외되면 대EU 수출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1995년부터 수혜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지만, 개발도상국은 그동안 GSP 제도를 통해 관세 감면이나 면제를 받고 수출을 해왔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GSP 혜택이 사라지면 EU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EU에 수출할 때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제도 개정으로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은 대EU 수출 생산기지로서 메리트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정부와 산업계는 GSP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2011년 초부터 지속적인 로비를 펼쳤으나, 결국 EU 집행위원회의 방침을 바꾸는 데는 실패하였다. 신발, 우산, 가발 등 여러 품목이 GSP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대EU 수출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U의 산업정책과 ‘혁신연합’

Industrial Policies in the EU and the Innovation Unio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eindustrialisation and concerns regarding the declining competitivenes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ve become important political issues in the EU. Also, the opinion that companies cannot survive on their own in the rapidly changing global environment has been gaining strength. Increases in government support and cooperation among member nations seem vital in strengthening Europe’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invigorating the green economy, which were the primary objects of the “Europe 2020,” the EU’s economic strategy for the next 10 years presented in early 2010. Compared to the rapidly emerging nations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the EU’s competitive edge has recently been weakening. Consequently, in October 2010, the EU announced more than thirty action plans aimed at establishing the Innovation Union, stating its goals at aiding innovation-based economic growth through industrial policies. The EU intends to achieve three goals through the Innovation Union: to develop the EU into a world-class science performer, to revolutionise the way public and private sectors work together, and to remove bottlenecks that prevent ideas getting quickly to the market.

EU 산업정책의 기초 변화

유럽의회는 EU 산업지원정책의 목적을 첫째, EU 산업이 급격한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를 통제하고 글로벌화로 인해 불가피한 산업 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것과 둘째, 연구, 혁신 및 산업구조를 유럽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¹ EU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자에 무게를 실었다면 이제는 후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기반 산업을 가진 경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던 ‘리스본 전략’이 실패한 이유로 지난 10년 동안 무분별한 경제 개혁과 회원국 간의 공통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EU는 2010년 초 발표한 향후 10년 동안의 경제 비전 ‘유럽 2020’의 주요 내용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와 회원국 간의 조율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는 탈산업화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주요 정치 이슈로 부상하였다.²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이 자력으로만 경쟁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 중

국 등 주요 경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산업육성에 쏟아붓고 있고 향후 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³

산업정책을 통해 혁신 중심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겠다는 EU의 의지는 「글로벌화 시대에 경쟁력과 지속성 제고를 위한 통합 산업정책」이라는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⁴ 같은 맥락에서 EU는 최근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인 제7차 프레임워크의 2012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70억 유로로 책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혁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U의 혁신 위기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에는 유럽이 세계경제의 중심이었으나 19세기 말 2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국이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로 부상하였다. 20세기 말에는 대량생산 중심의 산업화를 통해 빠르게 성장한 중국을 비롯한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기술 측면에서 유럽은 물론 미국과 일본을 빠르게 뒤쫓고 있다. 중국은 자체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¹ European Parliament (2000). Fact Sheets 4.7.1.: General Principles of EU industrial policy.

² 김경훈 (2011). “EU 제조업의 위기와 새로운 성장동력.” 『EU Brief』, 2(7), 18-23.

³ The global revival of industrial policy: Picking Winners, saving losers. (2000. 8. 5.). *The Economist*. <<http://www.economist.com/node/16741043>>

⁴ European Commission (2010). An Integrated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ra Putting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ility at Centre Stage.





★ 주요국 중장기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전망치

(단위: %)

구분	경제성장률		실업률	
	2010~2015년	2016~2026년	2015년 4분기	2026년
미국	3.1	2.2	5.3	4.9
OECD	2.8	2.1	6.2	5.6
영국	2.2	1.9	5.7	5.3
프랑스	2.2	1.7	8.7	8.2
유로 지역	2.0	1.6	8.7	7.3
일본	2.1	1.4	4.1	4.1
독일	2.3	1.0	7.2	7.2

자료: OECD (2011), OEC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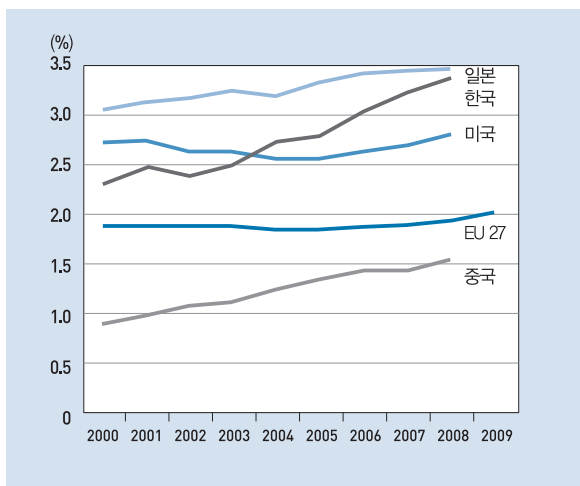
‘Made in China’에서 ‘Created in China’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⁵ 반면에 유럽은 인구 감소와 긴축정책, 기후변화 대비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투자자금 마련 등으로 인해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EU의 GDP 대비 R&D 비중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각각 0.8%p, 1.5%p 낮아 향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해 OECD는 EU가 중장기적으로 낮은 성장과 높은 실업률을 경험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우려한 EU는 2010년 10월에 혁신 연합(Innovation Union) 구축을 위한 30여 개 액션플랜을 발표하였다. 향후 스마트 사회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 요소라고 인식한 EU는 2020년까지 R&D 투자 규모를 GDP 대비 3%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표치가 달성되면 2025년까지 신규 일자리가 370만 개 창출되고 연간 GDP가 7,950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과학기술 수준

EU는 혁신연합을 통해 3가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EU를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보유국으로 성장시

★ GDP 대비 R&D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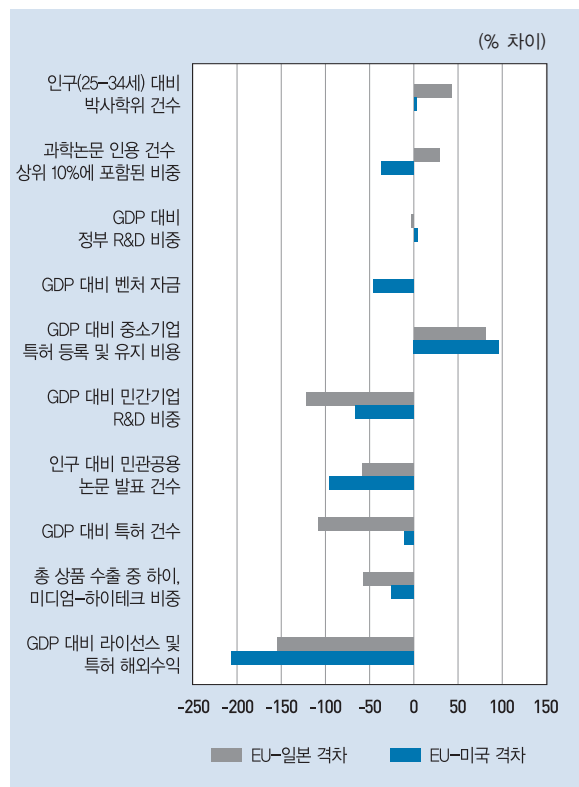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1), Innovation Competitiveness Report 2011.

키고, 민관협력을 강화하며, 시장 분열과 복잡한 특허 허가제도 등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EU의 과학기술 수준은 지난 20~30년간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으나 신흥국의 부상으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R&D 투자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과 2008년 사이에 EU는 50% 증가하는데 그쳐 미국(60%)과 아시아 주요국(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각각 75%)에 뒤처져 있다. 또한 BRIS(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각각 145%)와 중국(855%) 등 신흥국도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R&D 투자 규모는 현재의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2014년쯤 EU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GDP 대비 R&D 비중도 지난 10년간 2%대 초반에 머물며 여타 주요국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분야 R&D 투자에서 EU는 GDP 대비 1.3%에 불과해 미국(2.0%), 한국(2.5%), 일본(2.7%)에 비해 크게 낮다. 중국 민간분야의 R&D 투자는 GDP 대비 1.1%로 EU에 비해 낮지만 2000년대 들어 EU보다 30배 빠른 속도인 연평균 9.2%로 증가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저조한 R&D 투자 원인으로 하이테크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경제구조

★ 주요국의 혁신 지표 비교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1), Innovation Competitiveness Report 2011.

변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연구원 수를 비교해보면 16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EU(150만 명)와 미국(140만 명)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물론 노동인구 대비 연구원 수는 중국이 2명으로 EU(6명)와 미국(9명)보다 낮지만 혁신상품 개발에서 연구원의 절대적 수를 무시할 수는 없다. EU는 R&D 투자 확대와 함께 2020년까지 최소 100만 명의 연구원을 추가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구원 구성을 비교해보면 민간분야 연구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EU는 47%로 미국(80%), 한국(79%), 일본(76%), 중국(69%)보다 크게 낮은데 이는 민간기업의 R&D 투자환경 침체 때문으로 추측된다. 중국의 대학 신입생 수는 2009년 현재 600만 명을 상회하여 EU,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높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EU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 신흥국, 특히 중국과의 차이는 양적 측면에서 점차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U는 연구의 질적 수준에서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세계 동료심사 과학논문 수에서 EU는 29%를 차지하며 22%와 17%를 차지한 미국과 중국을 크게 앞섰고, 전체 과학논문 중 세계 상위 10% 피인용 논문 비중은 11.6%에 달한다. 특허 출원 건수(특허협력조약 기준)도 4만 9,545건으로 미국(4만 9,289건)보다 많고 중국의 7.7배 수준이다.

혁신 상업화와 유럽연구지역권(ERA)

EU의 연구역량이 질적으로 높더라도 상업화가 어려워면 혁신기업은 더 나은 연구와 투자 환경을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다. EU의 벤처자금 규모는 GDP 대비 0.09%로 미국(0.13%)보다 신제품 개발 기회가 현저히 낮고, 혁신과 관련하여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라이선스와 특허를 통한 해외 수익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중소기업이 EU 27개 회원국에서 특허를 등록하고 유지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은 16만 8,000 유로로 미국의 38배, 한국의 30배, 일본의 24배 수준이다. 이로 인해 EU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기회와 높은 비용 때문에 기업은 R&D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공동특허 시스템을 통해 혁신기업이 비용을 약 2.5억 유로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⁶

민관협력도 부족한데 인구 100만 명 대비 민관 공동논문 발표 건수가 EU는 36.2건으로 미국(70.2건)의 절반에 불과하다. EU는 2000년부터 회원국 간의 연구 중복을 방지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연구지역권(ERA: European Research Area)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EU 회원국의 R&D 예산에서 국가 간 공동

⁵ 박찬수 외 (2011), "혁신강국 중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대응" (CEO Information 제813호), 삼성경제연구소.

⁶ European Commission (2010), Europe 2020 Flagship Initiative: Innovation Union.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혁신 상업화와 유럽연구지역권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국 간의 규제 통일과 절차 단순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GDP 대비 17% 규모인 EU의 정부조달시장과 연동시켜 혁신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투자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EU는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주식상장 절차를 단순화시키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0년 10월 현재 EU 예산 4.3억 유로와 유럽투자은행(ETB: European Investment Bank)의 8억 유로를 투입하여 설립한 리스크공유지원펀드(RSFF)는 투자금 180억 유로 규모의 R&D와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한 바 있다.

유럽 혁신 파트너십

혁신연합의 대표 이니셔티브인 '유럽 혁신 파트너십'의 목적은 EU 회원국의 공통된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동시에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가치가 높은 산업분야를 발굴하는 데 있다. 또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통해 틈새시장을 개발하고 공익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힘을 예정이다. 주요 투자분야는 수명 연장 및 불치병 해결 의학기술, 온난화 감축기술, 대체에너지 및 대체원자재 개발, 수질 개선, 스마트 교통시스템 등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된 혁신역량과 투자자원을 집중시켜 EU 기업이 혁신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 주제로 '건강한 활동적 고령화'를 선정하고 2020년까지 유럽 인구의 건강수명을 2년 연장하는 데 기여할 다양한 혁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EU의 노동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2050년에는 50세 이상 인구가 지금보다 35%, 80세 이상

인구는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수명 연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방법을 개발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노인층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첨단기술이 접목된 케어 및 요양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가 파일럿 프로젝트에 성공하면 향후 민간기업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져 민관협력이 강화되고 더욱 많은 파트너십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젊은 발명가 지원제도 실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가 200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창업 또는 창업 준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중국과 미국에서는 각각 28%와 21%가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EU는 일본보다 1%p 낮은 13%를 기록하였다.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혁신 상업화 문제, 벤처자금 부족, 저조한 기술개발 역량이 EU의 창업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R&D 집약적 기업 중 '올리'⁷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EU의 R&D 집약적 기업 중 '올리'의 비중은 20%로 미국의 52%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유럽 혁신 파트너십'과 연동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만 16세에서 만 36세 사이의 발명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젊은 발명가 지원제도'를 입안하여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⁸

개방과 협업 필요성 증대

EU는 세계 주요국에 비해 혁신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 영국 등 개별 회원국들은 여전히 글로벌 무대에서 혁신 리더로

⁷ '올리'는 1975년 이후에 설립된 R&D 집약적인 기업 'Young Leading Innovators(Yolies)'의 줄임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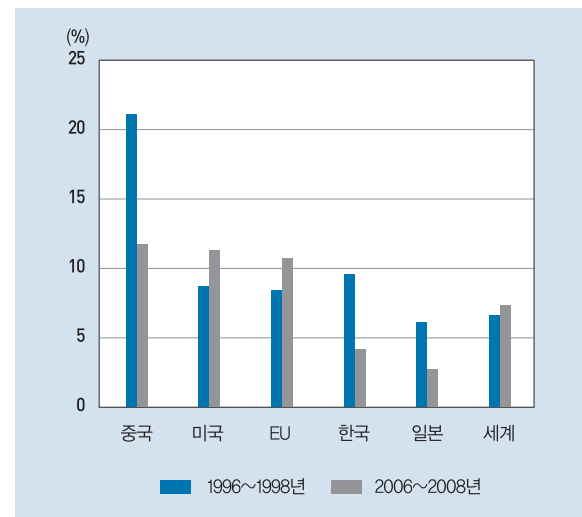
⁸ Young innovators seek new Erasmus. (2011. 7. 15.). EurActiv.

활약하고 있다.⁹ 예를 들어 영국기업 다이슨(Dyson)이 선보인 날개 없는 선풍기는 2010년과 2011년 여름에 전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되었고, 2011년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는 우주 탄생의 실마리를 찾게 해줄 반(反)물질을 1,000초 동안 포착하는 데 성공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EU 주요국이 향후에도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방과 협력이 중요하다. 우선 EU 역내 정보 및 기술 공유와 연구 인프라 통합으로 회원국 간의 혁신역량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2000년과 2009년 사이 2개 이상 회원국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과학논문 건수가 36% 증가하는 등 역내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활발한 지식 공유가 요구된다.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 연구진과 협업을 강화하여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신흥국은 EU의 높은 기술수준과 디자인 역량에 관심이 많고 EU는 신흥국 시장 정보와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스타급 과학자를 포함한 혁신인재 22만 명을 확보하였고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우수 과학인재를 간접적으로 확보하고 있다.¹⁰

마지막으로, EU의 주요 산업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혁신연합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업에게

★ 주요국 특허 중 해외 연구진이 포함된 건수 비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1), Innovation Competitiveness Report 2011.

당근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과감히 채찍을 들 필요가 있다. 산업 지원정책은 반드시 성과와 연계되어야 하고, 적용은 한시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⁹ 이들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Innovation Union Scoreboard 2010'의 상위 5대 국가다.

¹⁰ 류지성 외 (2011. 6. 29.). "두뇌공장 중국, 한국을 추월하다" (CEO Information 제810호). 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 협정과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문제

Korea-EU FTA and Legal Services Market

On July 1st, 2011, the Korea-EU FTA has finally come into effect. This brief examines the effects of opening up the legal services market through Korea's FTAs with the US and the EU. It is generally assessed that both FTAs will have similar effects on opening the legal services market. However, the Korea-US FTA plans to open up the market in a gradual 3-step process while the EU officials demanded an instantaneous opening as they wanted European law firms to dominate the Korean market before US firms entered. Also, the legal professionals from Europe will be able to use the same business names in Korea as they do in Europe, an agreement which seems to have been initiated by internationally competitive British law firms. Through these two FTAs, Korea has opened up its legal services market covering foreign and international law consulting. Such an open market should be wisely used as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improve domestic legal services and help domestic law firms become more competitive as well as to offer Korean citizens more diverse and wide-range legal service opportunities.

한-EU FTA 협상의 전개과정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드디어 잠정적으로 적용되었다. 한-EU FTA는 2010년 10월 6일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03년 8월에 한국정부가 「FTA 추진 로드맵」에서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한 후 7년의 시간이 더 걸린 것이다.

그동안의 한-EU FTA 협상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2006년 5월 15일 필리핀에서 열린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6일 협상이 공식 개시되었고, 2009년 7월 13일 한-EU FTA가 사실상 타결되어 2010년 10월에 정식서명이 이루어졌다. 아직 EU 각 회원국의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지난 7월 1일부터 잠정 적용하게 된 것이다. 문화협력의정서와 지적재산권 분야 형벌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하게 되었으니 사실상의 발효와 다름없는 효과를 갖게 된다.

한-EU FTA의 잠정 적용으로 한국은 총 27개국, GDP 약 13조 5,000억 달러 규모인 세계 최대 단일시장 EU와 더 나은 조건으로 교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법률시장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의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대응책을 살펴본다.

점진적·순차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담은 한-미 FTA

현재 한국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국내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다. 이는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법률시장 접근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는데, 시장접근 제한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아니한 자는 상술한 법적 실체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한국에 사무소를 두지 않으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합의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 관련 법률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 개방된다. 첫째, 협정 발효 이전에 일정한 요건 아래 미국 로펌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국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외국법자문사(FLC: Foreign Legal Consultant)로서 국내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둘째,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내에 일정한 요건 아래 외국법자문사와 국내 로펌이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자문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셋째,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내에 일

정한 요건 아래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합작운영을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미 FTA의 서비스 시장개방은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시장개방을 원하지 않거나 제한 조치를 유지하려는 서비스 분야를 명시하여 유보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면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법률시장 개방을 약속하면서도 시장개방에 대해 제한을 달고 있으며, 미래 유보를 통해 앞으로도 법률서비스 자격에 관한 요건, 경영진 국적,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등 각종 규제권한을 보유한다.

그러나 외국법자문사에 의한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협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완전 개방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과 외국 법조인의 법률서비스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2011년 3월 25일 법률 제9524호로 제정된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한국 법률시장 선점을 노리는 EU

한-EU FTA의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은 한-미 FTA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한-미 간의 법률시장 개방이 3단계 과정을 통한 순차적·점진적인 개방이라면, EU가 요구한 개방은 단계적 개방이 아닌 동시 개방으로 외국법자문서비스와 국내 로펌과의 업무 제휴와 변호사 고용을 한꺼번에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개방의 폭과 시기를 가급적 앞당겨 미국보다 먼저 한국 내 법률서비스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측된다.

특히 세계 제일의 법률서비스 강국인 영국을 중심으로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방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브리핑과 기사 등을 통해 알려진 것에 따르면 한-EU FTA의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은 한-미 FTA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수준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협상 초기부터 EU 협상단은 한-EU FTA의 개방 수준이 최소한

한-미 FTA와 동등해야 한다며 코러스 패리티(KORUS Parity)를 주장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EU가 한국과의 FTA를 서두른 데는 미국이 한국시장을 선점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요구가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결과적으로 한-EU FTA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는 환경, 위성통신, 법률시장 3개 분야에서 한-미 FTA보다 플러스적인 요소를 일부 갖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한-미 FTA가 시장개방을 제한하겠다고 기재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전면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한 반면, 한-EU FTA는 개방하는 분야를 일일이 기재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초래되는 차이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 FTA를 통한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정도 차이는 한-EU FTA 협정문을 직접 비교, 검토해보아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한-EU FTA 법률서비스의 특징

한-EU FTA의 법률서비스 분야가 한-미 FTA와 다른 점 중의 하나는 한-EU FTA는 한국 내에서 EU 출신의 법조인이 본국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 것이다. 법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평가 또는 어떠한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단순히 법조인의 직무능력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의 신뢰나 대외적인 명성 같은 외관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서비스 제공자가 한국시장에서 경쟁한다고 할 때, 그들이 본국에서 사용하던 특정한 명칭(title) 또는 한국인에게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의 최종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해 EU가 이처럼 변호사 명칭 사용에 대한 것까지도 신경을 쓸 만



큼 공격적이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공중 업무 등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3년 한국 정부가 DDA 협상을 위해 제공한 양허안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와 관련하여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한-미 FTA가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현재까지 한-미 양국 모두 FTA의 국내 비준이 담보상태에 있지만, 한-미 FTA가 한-EU FTA보다 먼저 발효된다면 한-EU FTA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플러스 요소가 고스란히 한-미 FTA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 정도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실이 과연 한-미 양국 간의 FTA 비준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새로운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문화협력의정서와 지적재산권 분야 형별조항을 제외하고 잠정 적용되는 한-EU FTA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아직 비준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읽기에 들어간 영국 로펌의 국내 진출

한-EU FTA 잠정 적용으로 개방된 국내 법률시장이 특히 경계하고 있는 대상은 영국의 대형 로펌이다. 로닷컴(www.law.com)이 발표한 2009년 전 세계 로펌 순위를 보면 영국 로펌의 강세를 알 수 있다. 영국 대형 로펌은 한-EU 잠정 적용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서울 삼성동과 서초동 일대에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또 “영국 대형 로펌 관계자가 국내 대기업 인사를 만나 자문계약 체결 사례와 로펌 선정 자료 등을 수집해갔다”는 기사도 보도되었다. 영국 대형 로펌의 국내 시장 간 보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응이 필요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은 상호 간의 자격인정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전

문인이 변호사 자격 취득국의 법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자격의 상호 인정처럼 특정 국가의 변호사 자격과 한국의 변호사 자격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자격이 인증된 국가의 변호사가 한국에서 국내 변호사와 똑같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EU 변호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감독 강화는 외국법자문사와 EU 법률사무소가 한-EU FTA에 명시된 국내 법률시장의 단계적 개방내용의 준수를 유도하고 불법 자문행위를 방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5월에 국제법무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국내 법률서비스 수준을 높여서 국내 법률시장의 국제경쟁력을 다지고 국내 로펌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영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중재 산업을 육성해서 국제 중재사건의 국내 처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위기를 기회로’라는 가치를 내걸고 한-EU FTA 잠정 적용 이후 물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 로펌에 대한 국내 법률시장의 능동적 대처를 강조하였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여러 국가의 법률시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내 로펌의 해외시장 조사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국내 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내 변호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참가를 지원하고, 국제법률 콘퍼런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한국은 외국법자문과 관련하여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외국법자문사법’이 제정되어 외국법자문사가 사용할 수 있는 명칭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 법률사무소가 국내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를 고용하거나 동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번 기회에 여태까지 사용해오던 외국 변호사 또는 국제 변호사라는 잘못된 명칭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수한 외국 변호사와의 경쟁에 대비한 전략뿐만 아니라, 반대로 질 낮은 변호사 유입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또한 시장개방이 국내 법률서비스를 더욱 선진화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에

게 더욱 폭넓고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은 상호적이므로 한국 변호사가 외국으로 진출하는 길도 열렸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시장 잠식만 우려할 것이 아니라, 한국 변호사가 더 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에 불고 있는 한류

The Korean Wave Striking Europe

K-pop has landed in Europe. It seems only natural that K-pop has chosen Paris as the bridgehead to advance into Europe. The French have historically been very interested in foreign culture, and were always open to talented foreign artists. It is especially meaningful that Korea's dynamic image was combined with new IT technologies such as SNS to spread K-pop. It is also significant that new ambassadors of Korean culture, such as Koreans adopted by French parents, have been found. To firmly establish K-Pop's expansion in Europe, development of new contents, innovative marketing, and government support are all necessary. It is said that a nation's cultural image sways its foreign competitiveness. In order for Korea to make the most of the Korean Wave's European expansion and to establish itself as world's true cultural leader of the 21st century while enhancing the national image, business, cultural, and governmental contribution should be combined to create synergy.

파리를 교두보로 유럽으로 진출하는 K-팝

K-팝(pop)이 유럽에 상륙하였다. 2011년 6월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초의 K-팝 라이브 공연에 이들 동안 1만 4,000여 명의 관객이 몰려드는 돌풍을 일으켰다. 1년 내내 외국 공연이 그칠 날이 없는 세계의 문화수도로 자부하는 파리에서 공연 티켓 7,000여 장이 발매 15분 만에 동나자 표를 구하지 못한 열성팬 300여 명이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다. 결국 공연은 하루 더 연장되었고, 공연단이 파리에 도착한 날에는 이례적으로 1,000여 명의 열혈팬이 입국장을 가득 메운 채 K-팝 스타들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광하였다. 이것은 K-팝이 글로벌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고 한류의 확고한 마니아층이 유럽에 형성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K-팝이 유럽 진출을 위해 파리를 교두보로 택한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프랑스인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외국 문화에 큰 호기심을 보였으며 역량 있는 외국 예술인에 대해서는 늘 문호를 개방하였다. 프랑스에는 문화쇄국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프랑스를 문화대국으로 만든 이유 중 하나다. 19세기 후반 유럽 화단을 강타한 '자포니즘'¹도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으며 쇼팽, 피카소, 샤갈 등 외국 예술가들이

천재적인 기량을 발휘한 곳도 프랑스다. 정명훈도 프랑스 국립오페라와 공영방송 오케스트라를 10여 년째 지휘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대중예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한류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대표적인 예다. 프랑스 영화팬 중에는 한국 유명 감독의 이름을 줄줄 외우고 있는 이들이 많다. 프랑스의 국립영화박물관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는 한국의 임권택 감독 등 외국의 거장 감독을 초청하여 최고의 예우를 해가면서 회고제를 개최한다.

역동적인 한류의 모습으로 부가가치 창출

이번 K-팝의 파리 입성은 몇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이번 공연은 그동안 해외에 주로 소개되었던 판소리 등 한국의 전통예술과는 달리 현대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제 한국은 중국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입하던 '동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아니라 역동적인 새로운 문화, 즉 '한류'를 창출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동, 미국, 남미 그리고 유럽까지 진출한 21세기 문화 수출국이다.

둘째, K-팝의 열기는 자생적이며 유튜브, SNS 등 21세기 인터넷 통신수단 덕분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또한 이번 공연은 과거의 초대 손님 위주의 한국문화 행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업

적인 공연이었다. 『르몽드(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등 주요 신문이 대서특필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높였으며 그 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

한류의 숨은 인적 자산, 한국인 입양아

이번 공연의 성공을 이끈 인물 중에 31세의 IT 기술자 막심 파케(Maxime Pacquet)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2살 때 입양된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유럽 한류 확산의 핵이라 할 수 있는 팬클럽 '코리안 커넥션'의 회장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류에 커다란 관심을 가졌으며 원래 1회로 예정됐던 이번 공연을 2회로 늘리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금 유럽과 미국에는 파케 같은 입양아들이 많다. 이들은 불우한 환경 때문에 조국을 떠나야 했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자신들의 뿌리인 한국과 한국문화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신들을 키워준 나라와 한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해외 홍보의 중요한 숨은 자산인 이들에게 좀 더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 도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새로운 콘텐츠와 마케팅 지원제도가 필요

유럽에서 2010년 현재 유튜브에 올라온 한국 가수 동영상 조회한 건수는 총 5,337만 건에 달한다. 나라별로는 프랑스(970만 건), 영국(827만 건), 독일(558만 건) 순인데, 이 세 나라를 중심축으로 유럽 대륙에 K-팝이 확산되고 있다. 파리 'SM 타운' 콘서트와 런

던에서 열린 샤이니 쇼케이스로 이제 K-팝은 유럽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유럽 사회 주류를 파고들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케팅 기법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K-팝의 전 세계 확산을 위해 음원을 무료로 서비스하되, 여기에 광고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사상 최초로 전 세계 '1억 클릭'을 돌파하는 K-팝도 나올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해외 무대에서 활약하는 클래식 인재를 배출하듯, 대중문화 쪽도 (비슷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또한 "최근 이수만 대표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 기부한 광고 출연료로 문화원 건물을 확장하여 유럽의 K-팝 팬들이 놀 수 있는 장(場)을 만들겠다"고 했다. 파리의 일본문화회관 건물이 일본 기업과 경제단체의 출연으로 건립된 것을 생각하면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의 기부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빅터 차(Victor Cha) 조지타운대 교수도 "세계 어떤 중간 국가도 한국처럼 자기 체급 이상의 편치를 날리는 문화를 가진 사례는 없다"고 말하였다.

문화 이미지는 그 나라의 대외 경쟁력을 좌우한다. 한류 유럽 진출의 모멘텀을 살려 한국이 21세기의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자리 잡고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문화계 등 모두가 참여하여 시너지를 내는 총력 지원 체제를 하루 빨리 가동해야 한다. ★

손우현 한림대학교 객원교수, 전 주프랑스 공사 겸 문화원장

¹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초까지 서양 미술 전반에 나타난 일본 미술의 영향과 일본적인 취향과 일본풍을 즐기고 선호하는 현상

지금 EU에는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가

Which Restructuring Does Europe Need the Most?

The European Commission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published a report under the title 'Structural reforms and external rebalancing in the euro area: a model-based analysis' in July. This report examines different ways to restructure the EU economy and assess their impact on the prevention of imbalances and the contribution to their correction. The report concludes that product market reform, wage moderation and fiscal consolidation can support and accelerate the correction of imbalances as they increase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short and medium term. It sends a hopeful message that if eurozone countries which are currently suffering from the financial crisis are willing to initiate structural reforms, it will bring permanent trade competitiveness gains.

EU 집행위원회 산하의 경제금융총국은 2011년 7월 「유로지역의 구조조정과 불균형 해소(rebalancing)」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와 독일 등 재정건전 국가의 양극화로 인해 유로화 단일통화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집행위의 고민을 담고 있다.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국가 간의 불균형은 일면 불가피한 결과이기도 하다. 단일통화 시스템은 모든 국가의 통화,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국가의 경제 상황에 최적화되어 대응하기 쉽다. 위기가 불거진 2008~2009년 동안 유로화 약세 현상으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가 수출경쟁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국가의 문제를 이러한 시스템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과거 수십 년간에 걸친 과도한 소비와 낮은 저축률로 인해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가 쏠아 터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유로지역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재정위기 국가가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유로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먼저 국가 간 불균형 예방 차원에서 가격이 나 임금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문제 해결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가격 유연성을 높이면 주택 가격 버블이나 수요 측면의 충격을 유발할 수 있고, 주택 가격 버블을 막기 위해 민간 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오히려 투자와 경상수지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을 높이고 주택담보 대출 규정을 강화하는 3가지 불균형 예방 조치를 동시에 취할 때에도 효과는 단언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유로지역 경제대국에 유리하게 작용해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지적도 가능하다.

반면에 국가 간 불균형을 조정(correction)한다는 의미에서 임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과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역 시장, 즉 서비스 부문에서 임금 조정을 통한 가격 인하는 장기적으로는 수입에 의존하던 서비스 영역을 내수 시장이 대체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혁하는 효과를 가져와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임금 조정을 통한 노동시장 개선은 정부의 세수 증대에도 영향을 미쳐 재정건전화에도 일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가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화를 꾀하는 방법이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최소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

요하지만, 정부지출 감소가 시장영역에서 상품경쟁력 강화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보면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보고서가 내놓은 유로지역 내 국가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구조조정안은 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위기 국가의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수출 경쟁력을 높여 5~6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최적의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가격 감소 1%, 임금 조정 1%, GDP 대비 정부부채 감소 5%인 상황에서 GDP 대비 무역수지가 각각 0.2%, 0.3%, 0.1%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유로지역 내 불균형을 없애려면 시장을 통한 성공적인 개혁으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계수입이 증가되어야 한다. 국내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노동시장과 가계수입이 정상화되어야만 전체 자본 흐름이나 수출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 수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을 염려하지만, 보고서는 초기에 시장의 공급 측면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수요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분석한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구조개혁으로 인한 불균형 해소는 현재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 구조인지와는 상관이 없다. 즉 유로지역 재정위기 국가가 지금이라도 구조개혁에 나선다면 현재의 외채문제는 물론 경상수지 적자 문제도 개선되어, 장기적으로 유로지역 우량 국가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다.

유로지역 국가가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취약 국가에 돈을 쏟아붓는 ‘하향 평준화’는 유럽의 선택이 될 수 없다. 또한 앞으로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단 일통화를 지키기 위한 유럽의 선택은 현재의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개선’ 하는 것이며, 이러한 구조조정의 키워드는 ‘시장’, ‘일자리’, ‘수출경쟁력’, ‘장기적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료: Vogel, L. (2011). Structural Reforms and External Rebalancing in the Euro Area: A Model-based Analysis (Economic Papers number 443).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

정민경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제8회 브뤼셀 포럼 The 8th Brussels Forum

On June 24th, the One Day CEO Training Programme, "Enhancing Korea's Trade with the European Union", was held at Sheraton Grand Walker Hill in Seoul, Korea. The event was organised by the Yonsei-SERI EU Centre, Rotterdam University,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and Maeil Business Newspaper. The event was moderated and hosted by Jun Yong Uk, the Dean of the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The first presentation of the programme was "The EU and Korea : Forming a Deep or WTO-Plus Free Trade Agreement" by professor Dilip K. Das of the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The second presentation was on "Exports to the EU: Sustainability Opportunities", by Professor Jan Roodenburg of the Rotterdam School of Management.

The third presentation was on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the EU" by professor Park Young Ryeol of Yonsei University's School of Business.

제8회 브뤼셀 포럼이 6월24일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아트홀에서 열렸다.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맞춤형으로 구성하겠다는 목표에 걸맞게 이번 포럼은 최고경영자 일일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연세-SERI EU 센터는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EU 정보를 원하는 수요자층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으로 다가간다는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아울러 경영자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녹색산업화를 통한 EU 수출 증대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일경제, 솔브리지 국제대학, 로테르담 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연세대학교 경영학 교수이자 연세-SERI EU 센터 소장인 박영렬 교수와 네덜란드 로테르담 경영대학원의 안루덴부르크 교수,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의 아시아 비즈니스 연구소 소장인 딜립 다스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다.



제2회 브뤼셀 Immersion Fieldtrip The 2nd Brussels Immersion Field trip

From June 27th to June 30th, the Yonsei- SERI EU Centre's "Brussels Immersion Field Trip" programme took place in Brussels, Belgium. On June 27th, the students visited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Belgium/European Union in the morning. Here, the students received background information on Belgium, the European Union, and the role of the Korean Embassy. Three officials from the ministries of education, foreign affairs, and finance, participated in a discussion with the students on EU-Korea relations.

In the afternoon, the students visite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The legal counselor of the Consilium's external affairs provided an informational session for the students. He explained the daily functioning of the council of ministers, the workings behind EU policy, the role of member states ministers and diplomatic officers.

On June 28th, the students visited the European Commission in the morning. The first speaker was Mr. Jacob Bork, a member of the external speaker's team, and formerly a Danish journalist. He expertly explained the organisation of the European Union and its institutions, drawing upon his years of experience with

the EU. He went on to describe the inner workings, power structure of the EU,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e second speaker was Mr. Marcel Roijen, Desk officer Korea in the EEAS. He delivered a lecture on the history of EU-Korea relations and the effects of the EU-Korea FTA. The third speaker, a budgetary officer of the EU, explained the EU's budget system and the main expenditures of the Union.

In the following afternoon, the students visited the European Parliament. They first met with a Hungarian Representative, who explained the significance of the Hungarian presidency in the parliament, and the role of new member states in the European Union. Next, the students met with a representative of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who explained the role of regional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xtent of their influences in the Union

On June 29th and 30th, the students conducted their team-based activities, according to their fields of interest and on the last day, the programme was concluded with a final seminar at Brussels Free University, where the students shared their experiences, thoughts, and findings with each other.





제2회 브뤼셀 Immersion Fieldtrip The 2nd Brussels Immersion Field trip

연세-SERI EU 센터는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2회 브뤼셀 Immersion Fieldtrip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이 브뤼셀 현지의 EU 기관을 방문하고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유럽통합과 관련된 현장 감각을 익히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에 참가한 20여 명의 학생들은 각 그룹별로 준비한 개별 프로젝트를 현지에서 수행하였다.

프로그램 첫날 참가 학생들은 주벨기에 EU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EU와 한국의 관계에 관한 기본 설명을 듣고, 한-EU FTA와 유럽 유학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EU의 최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EU 각료이사회를 방문하여 이 기관 소속인 법률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EU의 입법체계와 각 회원국 간의 의견 조율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둘째 날인 6월 28일에는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하여 9시부터 1시까지 총 3개의 강연을 들었다. 첫 번째 강연자였던 EU 집행위원회 대외관계 홍보담당자는 집행

위원회의 역사와 역할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기 위한 꾸준한 물밑 노력, 그리고 제도화를 위한 어려움과 도전과제 등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유럽대외관계청(EEAS)의 한국 담당자는 EU와 한국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설명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세 번째 강연에서는 EU 예산과 관련하여 EU의 주요 사업과 조직 운영, 최근 불거진 몇몇 회원국의 경제위기에 관해 들을 수 있었다. 오후에는 유럽의회를 방문하여 현직 유럽의회 의원으로부터 의회 구성과 목적에 관한 설명도 들었다.

6월 29일과 30일 오전에는 각 그룹별로 미리 제출한 주제에 따라 현지에서 개별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학생들은 EU의 문화산업, 입법, 교육, 기업활동 등 다양한 주제에 맞춰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지에서 담당자를 만나 자료를 모았다. 30일 오후에는 브뤼셀 자유대학에 다시 모여 각 그룹별로 진행한 개별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 중간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다양한 연구성과는 8월 말까지 완성하여 연세-SERI EU 센터 홈페이지와 『EU Brief』 10월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